

2022년 일본 정부의 임금 정책과 노동조합의 요구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일본

박준희 (일본 사이타마대학교 인문사회연구과 박사과정)

■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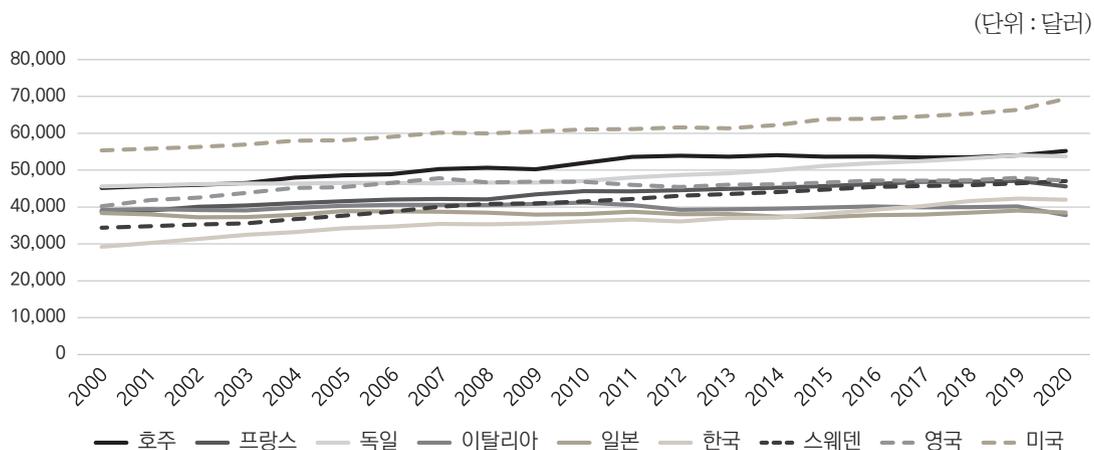
2021년 10월에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지난 20년간 일본 노동자의 임금이 거의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화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내각 출범 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본주의”를 거듭 강조하고, 기업에 임금인상을 독려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일본 정부는 보수와 처우가 특히 열악한 간호·돌봄·보육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임금인상과 더불어 법인세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3%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임금인상을 통해 분배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도 존재한다.

일본의 향후 노사관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임금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과 임금에 관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임금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2022년 춘투에서의 노동조합 요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일본의 임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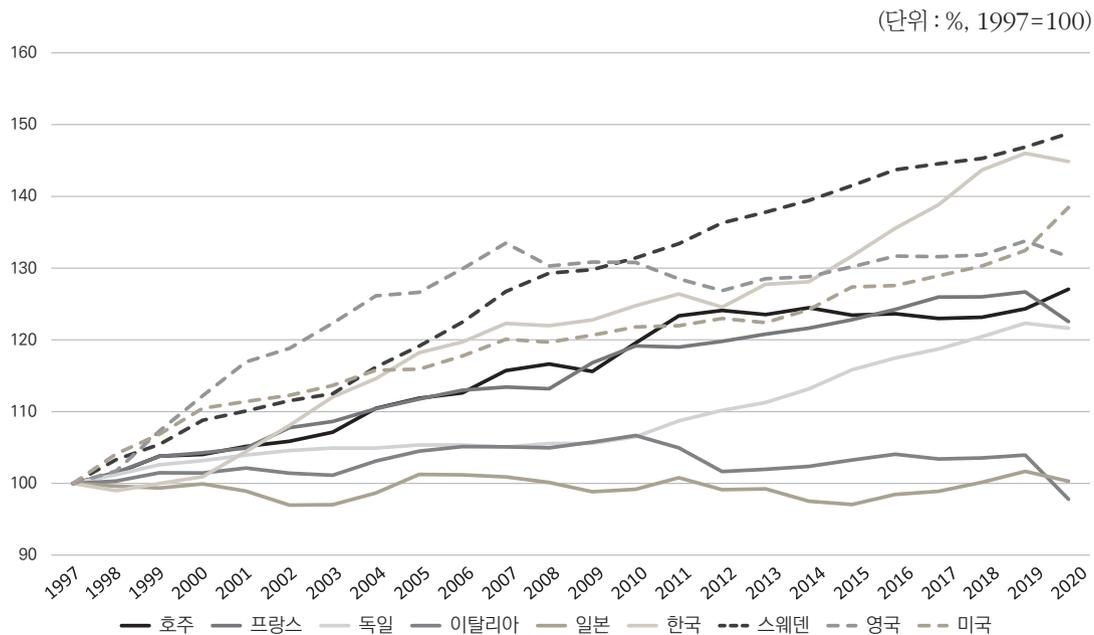
일본에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임금이 거의 인상되지 않았다. 이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

[그림 1] 주요 9개국의 구매력 기준 평균임금 추이



자료: OECD(2021), "Average Annual Wages", <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1.20); 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2021), 『春闘白書』, p.8에서 재인용.

[그림 2] 주요 9개국의 연평균 실질임금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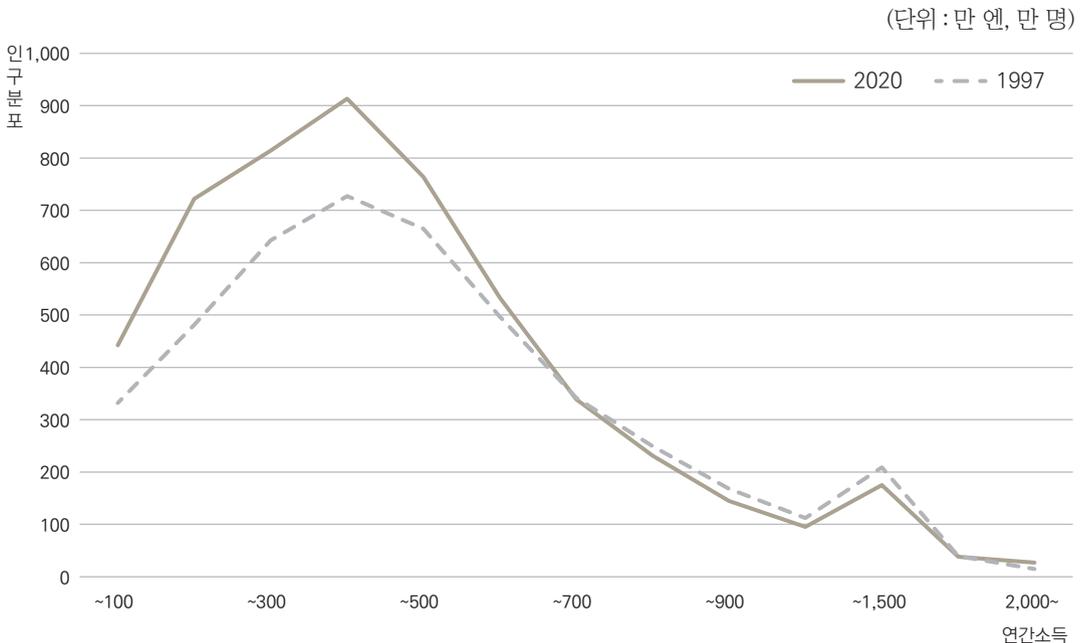
자료: OECD(2021), "Average Annual Wages", <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1.20); 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2021), 『春闘白書』, p.8에서 재인용.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에서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일본의 평균임금이 주요 9개국 중 8위에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2]에서는 1997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20년에는 일본의 연평균 실질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다른 주요 국가들과 크게 비교된다.

이렇듯 일본에서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소득 격차 또한 심화되어 왔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이하 렌고)는 임금상승의 정체와 더불어,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소득 양극화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그림 3 참조). 소득격차는 주로 비정규직과 같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비정규직은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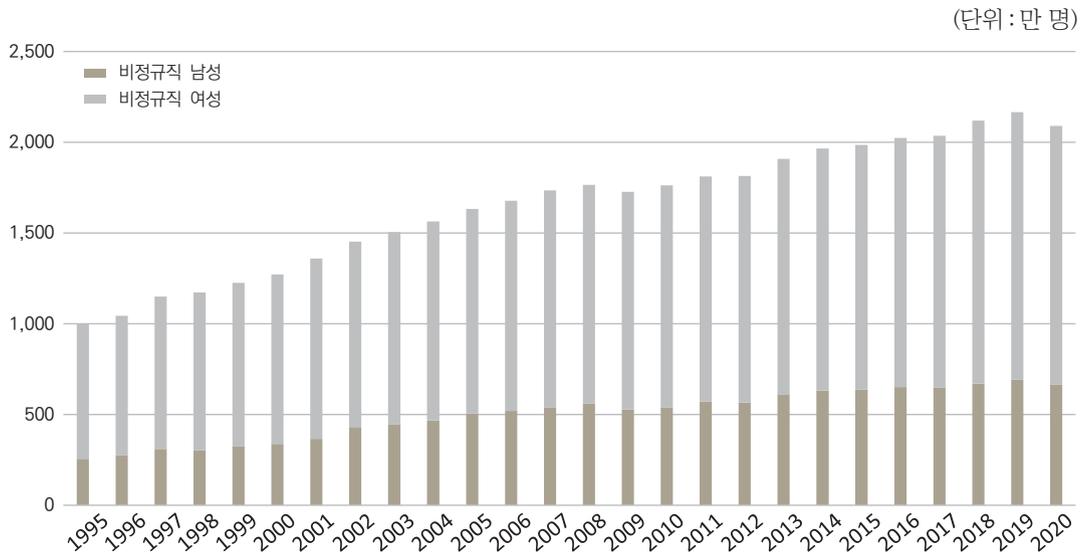
[그림 3] 일본의 소득 격차: 연간소득별 인구 분포도



주: 1997년과 2020년의 소득분포를 비교해보면, 2020년이 1997년에 비해 저소득층이 많고 중간소득층은 적으며, 2,000만 엔 이상의 고소득층은 더 많음.

자료: 国税庁, 「民間給与実態統計調査」, <https://www.nta.go.jp> (검색일: 2022.1.20); 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 (2021), 『春闘白書』, p.9에서 재인용.

[그림 4] 비정규직 확대 추이의 성별 비교



자료: 総務省統計局(2021), 「労働力調査」를 바탕으로 작성 (검색일: 2022.1.22); 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2021), 『春闘白書』, p.12에서 재인용.

참조).

이러한 점들이 2021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화두로 떠오르면서, 자민당 역시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방했다. 최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기시다 총리 또한 “분배 없이는 성장도 없다”며,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한 새로운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선언했다.¹⁾ 그는 최근 렌고의 신년회에 참석해 3% 이상의 임금인상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에 적극적인 임금인상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경단련은 임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까지 일괄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 기시다 총리의 경제 노선은 양적 완화와 경기부양에 중점을 둔 이른바 “아베노믹스”와 크게 달라 보인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주장하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으며, 취임 이후 내놓은 경제정책도 아베 전 총리의 성장중시 전략과 유사하다.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의 구상이 아베 정권과 차이가 있는지, 또한 분배를 통해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 노동조합의 요구

이하에서는 임금인상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의 전국 중앙조직 중 렌고가 전체 조합원의 68.1%,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전노련)이 5.1%,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전노협)가 0.9%를 조직하고 있다.²⁾ 따라서 이 글에서는 렌고의 2022년 춘투 방침을 통해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렌고는 크게 임금인상, 성별 격차 개선,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책 도입이라는 세 가지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³⁾

임금인상 및 임금격차 개선

렌고는 기업이 인건비가 아니라 주주 배당금에 큰 돈을 투자해 왔기 때문에 일본의 실질임금이 낮아졌다고 설명하면서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격차가 커졌고, 이는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노동자와 그 비율이 낮은 남성 노동자 간 임금격차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렌고는 전반적인 임금인상과 임금격차 개선을 2022년 춘투의 목표로 삼고 있다.

우선 렌고는 전체적인 임금과 관련하여 4%(기본급 2%, 정기승급분 2%)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격차 개선과 관련하여 기간제, 파트타임,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렌고는 2021년 춘투에서 기간제, 파트타임, 계약직 노동자 조합원의 임금인상률이 풀타임 노동자 조합원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냈으며, 이번 2022년 춘투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렌고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2021년 춘투에서 요구했던 임금요구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쟁취하여 격차를 줄이겠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렌고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임금을 적극적으로 인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 수치는 후생노동성(2019), 「令和2年労働組合基礎調査の概況」.

3) 렌고의 2022년 춘투 방침과 관련해서는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2021년 발행한 연합백서(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2021), 『連合百書』)를 참고했다.

성별 격차 개선과 평등 실현

최근 발표된 성 격차 지수(GGI)에서 일본은 156개국 중 120위였다. 선진국 중에서는 최하위 수준이었고, 아시아 주요국에서는 한국(102위)과 중국(107위)보다 낮았다. 렌고는 이처럼 일본이 성평등과 관련된 조사에서 낮은 순위를 보이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남녀 간 임금격차를 꼽는다.

렌고는 코로나19 이후에 남녀 간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되었고, 비정규직의 약 70%를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의 고용이 한층 더 불안정해졌으며, 여성의 생활이 훨씬 더 힘겨워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기에 2022년 춘투에서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여성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빈곤 해결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녀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성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장시간 노동 시스템을 개혁하고 육아 인프라를 정비하여,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도입

격차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와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사회보장이나 세수에 의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낮은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렌고는 사회보장제도 개혁, 교육제도 개혁, 세금 개혁을 바탕으로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렌고는 당면 과제로서 2021년도 경제대책·보정예산(추경) 성립 및 2022년도 예산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예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렌고는 앞서 말한 임금인상 및 임금격차 개선,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한 투쟁과 더불어 노동자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맺음말

앞에서 살펴보았듯, 일본 정부가 임금인상을 호소하고 있고 노동조합도 격차 완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임금인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조합의 요구와 정부의 주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 3~4% 정도의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3~4% 정도의 임금인상으로 일본의 낮아진 노동분배율이 다시 상승 국면을 맞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기업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인상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금(賃上げ税制)의 공제율을 훨씬 높이는 정책을 도입했다.⁴⁾ 법인세 감세가 과연 공정한 분배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렌고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20년간 일본의 임금이 정체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렌고의 온건한 투쟁 방식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2022년 춘투백서에 명시한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임금인상을 이뤄내겠다.”라는 전략은 우려스럽다. 렌고가 향후 어떠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느냐에 따라 일본 노동자의 임금인상 폭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된다. **KLI**

4) 임금인상과 관련한 세액공제 제도 및 2022년 세금정책과 관련해서는 본호 세계노동소식 중 「일본: 기시다 총리, 임금인상촉진을 위한 감세정책 확대 시행 발표」를 참조.